

輸出促進을 위한 最適關稅의 理論

李 俊 求*

<目 次>	
I.	序 論
II.	最適關稅의 模型
III.	要約 및 政策的 含意
	脚 註
	參考文獻

I. 序 論

전통적으로 關稅는 국내의 산업을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에 대해서 保護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한 실제로 적용되어 왔다. 비록 關稅가 여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하나 역시 그 主目的은 수입의 양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경향은 最適關稅의 이론이 輸入量의 減少가 가지는 厚生的 效果나 交易條件에 대한 영향등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關稅가 비록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Rieber(1981)의 짧은 論文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특정 輸入品에 대한 關稅의 賦課는 그것을 輸出品으로 轉換시킬 수도 있음을 理論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 이와 같이 수입품이 수출품으로 바뀔 수 있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이 논문은 1984년도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지원을 받았으며 韓國經濟學會의 「1984年度 定期學術大會」(1985.2.22, 서울)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그 條件이란 어떤 경제에서 문제되는 商品이 국내의 獨占生産者에 의해 공급되며 국제적으로는 그 경제가 價格受容者란 것이다.

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일이다. 關稅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그것이 수입되는 양을 0으로 줄일 수는 있으며 수입품이 되는 등 交易의 方向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可能性은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에 그칠 뿐 실제로 Rieber가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여 交易의 方向이 바뀐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關稅는 수입의 양을 줄이거나 수입품을 輸出品으로 전환시키는 이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關稅는 이미 수출되고 있는 商品에 부과 되어 輸出量을 더욱 늘리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²⁾ 關稅가 輸入品이 아니라 輸出品에 부과된다는 사실이 逆說의으로 들릴지 모른다.³⁾ 그러나 사실에 있어 關稅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실례는 너무나도 많다. 많은 開發途上國의 政策立案者들이 이와 같은 關稅의 기능을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며 韓國도 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선 어떤 여건하에서 關稅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를 살펴보자.

關稅가 輸出을 촉진할 목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商品의 國內시장이 獨占되어 있으며 獨占者는 國內 消費者에 대해 價格差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獨占者가 國內소비자에 대해서 매기는 價格이 輸出價格과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國內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래야만 國內에서 팔릴 수도 있었을 물건이 輸出로 돌려지고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데 獨占者의 海外輸出價格은 그 商品의 國際價格水準일 것이며 이와 같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괴리는 그 商品이 國內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逆流現象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政府가 설치해 놓은 關稅를 위시한 갖가지의 貿易障壁은 이러한 逆流를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二重價格構造를 온존시키게 된다.

똑같은 商品의 輸出價格과 國內價格이 다르다는 것은 엄연한 差別的 行爲인데도 政府가 이를 是正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關稅등의 무역장벽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의 協調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여튼 政府가 關稅를 이와 같이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제

2) 예를 들어 Corden(1971)을 보라.

3) 여기서 ‘輸出品’이란 용어는 그 경제에서 수출을 행하고 있는 品目을 의미한다. 물론 관세는 이 물건이 수입되고자 할 때에만 부과된다.

4) 國內시장에 獨占生産者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엄격하게 성립될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 寡占生産者들이 담합을 통하여 獨占者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해외수출일 경우 특히 현저한 현상이다.

에 있어 輸出品의 國內・外 價格의 乖離라는 형태로써 나타날 것이다. 韓國이 이 범주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표 1)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이 표에서 보듯 몇개의 主要輸出品目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외없이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현저히 높고 그 격차는 때때로 수출가격의 100%를 넘기도 하는 것이다.⁵⁾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덤핑의 문제도 本論文의 主題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主要 目的은 이러한 「重商主義의」인 정부의 정책을 순수한 厚生經濟學의 觀點에서 批判, 檢討하려는 것이 아

(표 1) 몇가지 品目에 대한 國內價格과 輸出價格의 格差

品 目	單 位	國內價格 (\$)	輸出價格 (\$)	暗黙의關稅 率* (%)	1981년도 關稅率 (%)	1980년도 輸出額 (\$백만)
컬러 TV	대 당	437	182.5**	139.5	50	
黑白 TV	대 당	127	55	130.9	50	420.0
冷 藏 庫	대 당	378	172.5**	119.1	50	N/A
乘 用 車	대 당	5,270	2,800	88.2	100~150	49.7
鐵 筋	%	303	235	28.9	10	347.7
鐵 板	%	353	305	15.7	20	556.0
肥 料	%	314	252.5	24.4	20	343.6
타 이 어	개 당	96	97.5	0	40	477.1
亞 鉛	%	1,164	1,000	16.4	20	9.4
플라스틱	%	1,077	850	26.8	30~40	132.9
紙 類	%	585	550	6.4	30~40	141.3
시 멘 트	40kg	2.5	1.8	38.9	20	270.4

註: * 이 暗黙의 關稅率은 國內價格과 輸出價格의 隔差를 輸出價格으로 나눔으로서 계산하였다. 물론 輸送費등 기타 비용이 무시된 것은 약간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 이 값들은 원래 발표된 가격의 범위에서 그 중간을 취한 값이다.

資料: 東亞日報, 1981. 11. 25.

니다. 만약 政府가 輸出을 늘려야 하겠다는 意志를 가졌다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本 論文은 출발하고 있다.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이 설정하고 있는 現實下에서 이들이 왜 수출에 그다지도 관심을 갖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政治的인 動機를 사상하고 순수히 經濟的인 면에 국한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방식의 輸出振興에서 기대될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은 外貨의 획득 뿐일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5) 이 표에 제시된 자료는 매우 낡고 또한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덤핑문제에 관한 政府 및 業界의 心경과 民성향에 비추어 보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公式統計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開發計劃의 수행에 있어 外貨의 부족이 중요한 制約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들 開發途上國들이 外화획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때때로 주장되듯이 더 많은 수출이 더 높은 國內의 雇傭을 의미한다는 말은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더 많은 수출이 더 많은 生産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양의 生産量이 國內시장에서 해외수출로 再分配되는 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國內의 雇傭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原論의인 論議에 의하면 外貨의 稀少性은 당연히 높은 換率로 나난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 존재하는 갖가지 교란요인(distortions)들은 公定換率이 정확한 外貨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게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外화의 진정한 가치는 公定換率이 나타내는 바 이상일 것이며, 더 많은 輸出이 더 많은 外貨收入을 의미한다면 輸出을 늘이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음 章에서는 關稅가 輸出促進의 방법으로 쓰일 때 最適關稅는 어떻게 導出될 수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여기서의 最適 關稅란 수출촉진으로부터의 社會的 純價值가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最適關稅의 도출은 分配的인 측면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에 대해 각각 행해질 것이다. 마지막 章은 政策的 含意를 검토하고 결과를 요약하는 章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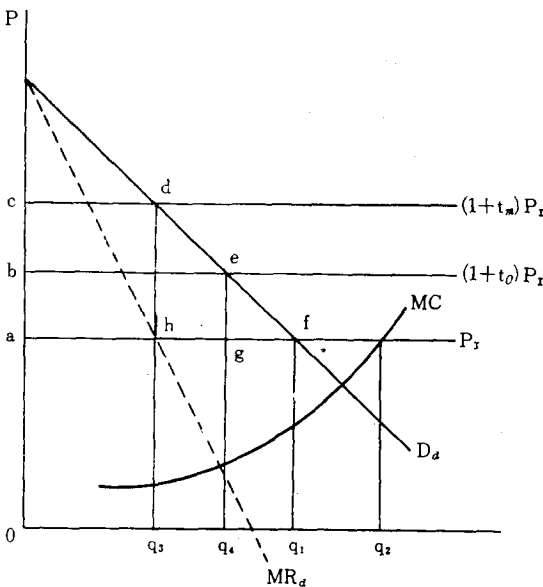
II. 最適關稅의 模型

우선 自由貿易體制下에서 어떤 물건을 輸出하고 있는 한 經濟를 상정하자. 그商品이 국내에선 한 獨占事業家에 의해 생산되며 이 獨占者가 직면하고 있는 需要曲線은 국내에서는 右下向의 曲線(D_d)이며 국제시장에서는 水平線(P_I)이라 하자. 또한 (그림 1)에서 보인것과 같은 전형적인 新古典派的 費用曲線을 가정한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利潤이 극대화되는 생산수준과 國內 및 國際市場間의 配分問題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우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獨占者는 $Oq_2(=Q_2)$ 만큼의 생산을 해서 국내시장에 $Oq_1(=Q_1)$ 만큼 판매하고 나머지는 국제시장에서 파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獨占者가 두 市場에서 받는 單位價格은 일치하며 單純 獨占者로서의 이윤은 극대화된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든 兩市場의 差別이 가능해짐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需要彈力性이 낮은 국내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높임으로써 兩市場에서의 限界收入(MR)을 일치시키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양은 $Oq_3(=Q_3)$ 로 줄고 q_3q_2

($=Q_2-Q_3$) 만큼이 수출되게 된다. 그러나 애초에 가정한 自由貿易體制下에서는 이와 같은 價格差別이 불가능하다.

價格差別은 關稅가 부과되면서 가능해진다. 兩市場이 關稅라는 장벽으로 격리되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 단위당 t_0 의 關稅率을 물어야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獨占者가 직면하는 有效需要曲線은 세계의 선분 be, ef, fP_I 로 구성되게 된다. 이와 같은 關稅의 장벽이 價格差別을 가능하게 하고 그 企業이 실제로 差別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국내소비자에게는 $(1+t_0)P_I$ 의 가격을 매기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P_I 의 가격을 매김으로서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다.⁶⁾ 그리고 이 이윤은 물론 單純獨占時 즉 價格差別이 없을 때의 이윤보다 크다.

결국 이 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에 부과된 관세는 전통적인 理論의 시각에서 보면 무의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獨占的 生産者에게 價格差別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輸出增進이라는 목적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 된다.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수입되는 品目에 부과되는 보통의 關稅인 경우와는 달리 生産에 대



(그림 1)

한 效果가 전혀 없다는 점이 다.⁷⁾ 輸出의 增大는 生産물이 국내시장서 국제시장으로 再分配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수출의 增加에서 得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外貨收入의 증대 뿐이다. (그림 1)에서 t_0 란 관세율이 賦課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外貨의 양은 gfq_1q_4 의 면적으로 나타내져있으며 輸出增加에서 오는 社會的 價値의 증가는 이 면적과 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중전보다 더 높

6) 따라서 이 獨占者는 국내시장에서 $Oq_4(=Q_4)$ 의 양을 판매하고 나머지 q_1q_2 를 수출한다. 국내시장에서의 限界收入曲線에 不連續性이 있기 때문에 限界收入이 두 市場에서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配分이 이윤을 극대화하기는 한다.

7) 일반적으로 관세는 國內生産을 촉진시키는 '生産效果'를 가진다.

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국내소비자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befa 란 면적으로 나타내어지는 消費者剩餘를 잃는다. 그러나 사실 이 면적은 두가지 다른 성질을 가진 면적의 합이다. 즉, 消費者로부터 生産者로의 所得再分配을 나타내는 면적 bega 와 순수한 社會的 純損失(Deadweight loss)을 나타내는 면적 efg 의 합이다. 물론 後者은 순전한 社會的 厚生의 감소와 직결되지만 前者는 分配問題에 대한 價值判斷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分配面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最適關稅를 도출하려 한다.

1. 分配側面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最適關稅

우선 주의해야 할 사실은 最適關稅率이 (그림 1)에서 보여지는 t_m 이란 率 以上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⁸⁾ 비록 관세율이 이 이상으로 올려진다고 해도 價格差別을 행하는 國內의 獨占生産者는 國內價格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무의미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국내시장에서 OC 의 가격으로 Oq_3 만큼 판매함으로써 이미 이윤극대화는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最適關稅率은 O 에서 t_m 사이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再分配效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最適關稅率은 다음에 제시된 社會的 純價値를 극대화하는 率이 될 것이다.

$$(식 1) V = \alpha P_I(Q_1 - Q_t) - \left[\int_{Q_t}^{Q_1} P(Q) dQ - P_I(Q_1 - Q_t) \right]$$

단, $P = P(Q_t) = (1+t) P_I$ 이다. 여기서

α : 1 단위의 가득의화에 적용될 수 있는 프리미엄

$P(Q)$: 국내수요곡선

$Q_1 : P_I = P(Q)$ 가 성립하는 산출수준을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첫번째 項은 추가적으로 얻어진 外貨와 결부된 프리미엄의 가치이며, 두번째 項은 국내소비자에 의해 부담된 社會的純損失을 나타낸다. 가정에 의해 再分配的 效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므로 면적 bega 는 위의 표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극대화의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最適關稅率을 얻는다.

$$(식 2) t^* = \alpha$$

즉, 추가적인 외화가득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의 율과 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⁹⁾

8) 平均收入 (AR)과 限界收入 (MR)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frac{AR}{MR} = \frac{\eta}{\eta - 1}$$

렇게 도출되는 最適關稅法則의 장점은 그 單純性에 있다. 국내수요곡선이 右下向하기만 하면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가지 참고로 지적할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商品에 적용되는 관세는 그 稅率이 商品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分配側面을 고려할 때의 最適關稅

우리가 再分配效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 경제내에 분배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주는 機構가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正當化될 수 있는 태도이다. 그러나 한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그러한 機構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再分配效果까지 고려되어 도출된 법칙이 보다 더 現實性이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앞서의 경우와 다른 점은 오직 하나이다. (식 1)로 대표된 社會的 純價値의 표현에 하나의 項만이 추가된 것이다.

$$(식 3) \quad V' = \alpha P_I(Q_1 - Q_t) - \left[\int_{Q_t}^{Q_1} P(Q) dQ - P_I(Q_1 - Q_t) \right] + \beta t P_I Q_t$$

여기서 係數 β 는 지금 설명하려 하고 있는 差別的 分配加重值(differential distributional weight)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소비자로부터 獨占生産者로 관세부과에 의해 再分配된 소득이 $tP_I Q_t$ 에 달하는 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경제내의 상이한 그룹으로 귀속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달려있게 된다.⁹⁾ 이러한 主觀的 價値判戰에 따라 위의 再分配는 그 경제의 厚生이 改善된 것일수도 있다 결국계수는 政策立案者가 소비자로부터 獨占生産者로 移轉된 1단위의 소득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¹⁰⁾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再分配를 否定的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계수 β 의 값이 負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물론 이것이 陽이라고 해서 分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社會的 最適狀態의 제 1제조건은,

$$(식 4) \quad [P(Q_t) - (1 + \alpha) P_I + \beta t P_I] \frac{dQ_t}{dt} + \beta P_I Q_t \leq 0$$

단, η 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AR = (1 + t_m) P_I$ 이고 $MR = P_I$ 로 쓸 수 있다 따라서 $t_m = \frac{1}{\eta - 1}$ 이 성립한다.

9)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화폐단위는 \$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10)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係數 β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W(Y, D)$ 를 국민소득 Y 와 分配狀態 D 에 의존하는 社會的 厚生函數라 하자. 1달러의 소득을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함으로써 분배상태가 D' 으로 된다면 종전의 사회적후생수준을 유지시키는 국민소득의 수준 Y' 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계수 β 는 $\beta = Y - Y'$ 이란 공식을 통해 도출된다. 그러나 단순화를 위해 β 는 常數로 가정된다.

로 표시된다. 여기서 最適關稅가 陽이면 위의 조건은 等式으로 성립된다.¹¹⁾ 이 경우 $P(Q_t) = (1+t)P_I$ 란 이미 우리가 아는 관세를 代入함으로써

$$(식 5) \quad t - \alpha + \beta t - \frac{1}{\eta^*} (1+t) = 0$$

를 얻는다. η^* 는 社會的 最適의 근방에서의 그 商品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지칭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最適關稅를 도출할 수 있다.¹²⁾

$$(식 6) \quad t_D^* = \frac{\alpha + \frac{\beta}{\eta^*}}{1 + \beta - \frac{\beta}{\eta^*}}$$

그런데 이 法則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데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위의 (식 6)이 알지 못하는 값 η^* 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³⁾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需要彈力性은 임의로 부과된 관세율하에서의 그것이지 반드시 (식 6)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社會的 最適 근방에서의 彈力性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η^* 가 관찰가능한 상황하에서 실제로 측정된 수요탄력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β 가 負라고 한다면 분배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추가했을 때 종전보다 最適關稅率이 높아져야 하는가 낮아져야 하는가는 수요탄력성, η^* 의 크기에 달리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eta^* \leq \frac{1+\alpha}{\alpha}$ 임에 따라 $t^* \geq t_D^*$ 인 결과를 얻는다. 왜냐하면,

$$(식 7) \quad t^* - t_D^* = \frac{\beta \left(\alpha - \frac{1+\alpha}{\eta^*} \right)}{1 + \beta - \frac{\beta}{\eta^*}}$$

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만약 수요탄력성이 매우 높으면 關稅率이 높아질 때 소비자로부터 獨占生産者로 이 전되는 소득의 크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어 보다 높은 관세율이 보다 적은 否定的인 再分配效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係數 α 가 정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내에 국한시켜

11) $\beta \geq -\frac{1}{2}$ 이 第二階條件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조건이 다음에 구할 最適關稅法則의 적용성에 어떤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β 가 $-\frac{1}{2}$ 보다도 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12)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最適關稅率이 負로 나올 수도 있다. 第二階條件으로서 $\beta \geq -\frac{1}{2}$ 이 만족된다고 하면 (식 6)의 分母는 항상 陽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값의 α , β 혹은 η^* 에 대해 분자가 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가정으로 除外하기로 한다.

13) 비슷한 문제가 外部性과 관련된 소위 'Pigou 稅'의 논의에서도 등장한다.

14) 관세율 t 가 변할 때 이전되는 소득의 양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본다면 α 는 1보다 훨씬 작은 것이 보통이고 또한 η^* 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t_D^* 가 t^* 보다는 작을 것이 기대된다. 물론, 이 경우 양자의 차이는 分配의 加重值 β 에 비례할 것이다. 하여간 문제되는 商品의 수요탄력성 η^* 이 크면 클수록 要求되는 關稅率 t_D^* 는 높아진다. 따라서 앞서 分配的 側面이 고려되지 않을때 同一한 率의 關稅가 要求되던 것과는 달리 關稅율이 문제되는 商品의 수요탄력성에 비례하는 關稅構造가 요구됨을 볼 것이다.

Ⅲ. 要約 및 政策的 含意

本論文에서는 關稅가 輸出促進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이때 最適狀態를 위해 필요한 關稅率의 構造를 도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이 논문에서 제시한 理論的 基礎 이상의 여러 실질적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分配的 側面이 고려된 경우의 最適關稅率은 社會의 最適狀態에서의 특정 商品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시된 理論의 현실에 있어서의 적용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理論은 최소한 政策立案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명백히 해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의 행태를 관찰할 때 이와 같은 最適關稅法則에 입각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표 1)에서 제시된 암묵적 關稅율은 品目別로 큰 차가 나고 있는데 이 差異가 理論에서 요구되는 차이를 반영하는가는 크게 의심이다. 만약 關稅政策이 실제로 있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本論文에서 제시된 最適關稅法則을 적용하는데서 얻는 潛在的 利得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해외시장에서의 수요탄력성이 무한하다고 가정되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시장에서의 수요탄력성이 무한하지 못하다면 最適關稅率의 도출은 무척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右下向의 해외수요 곡선이 보다 현실적일 경우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앞으로의 理論的 擴張이 기대되는 측면이다. 또한 實證的인 면에 있어서도 關稅가 수출촉진을 위해서 사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하고 이의 厚生經濟學的 분석을 시도하는

$$\frac{dI}{dt} = P_1 Q_1 \left(1 - \frac{t}{1+t} \eta \right)$$

따라서 η 가 매우 높으면 關稅율 t 를 올릴 때 이전되는 소득의 양은 줄어든다.

것도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Corden, W., *The Theory of Protection*, Oxford, 1971.
2. _____, *Trade Policy and Economic Welfare*, Oxford, 1974.
3. _____,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Protection: A Survey of Empirical Work," in P. Ken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1975.
4. Ethier, W., "Dump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0, June 1982, pp. 487~506.
5. Rieber, W., "Tariffs as a Means of Altering Trade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December 1981, pp. 1098~1099.

□ Abstract □

The Optimum Tariffs for Export Promotion

Joon Koo Lee

Traditionally, tariffs have been perceived as a means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from foreign imports. Although they have been used for other purposes from time to time, they have been primarily used for reducing the volume of imports. Until recently, therefore, the theory of optimal tariff has focused on the welfare effects of reduced imports and the change in the terms of trade. The fact that tariffs can potentially affect exports as well as imports has not been recognized clearly. It is Rieber's (1981) short paper that first demonstrates tariffs can do more than merely reducing the volume of imports. He shows that the levy of a tariff on an imported good may lead the economy to begin exporting the commodity when the domestic market is monopolized. The traditional wisdom that a tariff can at most eliminate imports but cannot reverse trade flows has proven to be true only under certain assumptions about the market structure.

There is still another purpose tariffs can serve. That is, a tariff can also be used for increasing the volume of exports. The difference of this case from the Rieber's case is that in this case a tariff does not reverse the trade flows, but simply increases the export of the commodity which has been already exported. Even though the idea of using a tariff as a means of promoting exports has evaded the attention of economists, the policymakers of many LDCs have long been employing tariffs exactly for such a purpose in actuality. One would be surprised to observe that in most LDCs, tariffs, usually of high rates, are levied even on the commodities which they export massively. Under the tradition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such tariffs are ineffective since they do not import the commodities. There is no reason why such ineffective tariff should be kept, but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do not show any intention of eliminating them. This very fact testifies that they are well aware of such an effect of tariffs.

The condition under which a tariff can be used as a means of promoting export is that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mmodity is monopolized and that, in addition, the monopolist is allowed to discriminate against domestic consumers. The condition that the domestic market be monopolized need not be met literally. Even though there are a few apparently competing firms in a certain industry, their collusive behavior concerning the discrimination of domestic consumers could lead to the same result. The critical condition is the second one, i.e.,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condone the discriminatory practice.

If the government actually uses tariffs for such a purpose, it will be manifested in the market in the form of dual structure of prices with domestic prices much higher than export prices. For example, this dual structure is all too clear in case of the Korean economy. We can detect the similar pattern for other LDCs and even an MDC such as Japan is sometimes accused of employing such a policy.

This mercantilistic policy might be difficult to justify on pure welfare economic grounds, but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s of LDCs desperately need foreign exchanges to finance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side from polit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export promotion, these governments' interest in the ways of boosting export can be justified in this context.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discuss the advisability of export promotion *per se*. Rather, it starts from the explicit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foreign exchange earning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se countrie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official exchange rate configuration would suggest, perhaps because there are other distortions in the economy.

If more export means more foreign exchange earnings, this should be credited as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is economy's welfare. This is the approach I am going to take.

In Section II, I derive an optimal tariff rule when a tariff is used as a means of promoting export. The optimal tariff rate will be the one which maximizes the net social value of export promotion. The derivation of the optimal tariff rule will be done both with and without distributional considerations. The final section concludes the paper with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 summary of results.

Ideally, the government is advised to adopt a tariff rate which maximizes the net welfare gain. The optimal tariff rule derived in this paper lay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optimal tariff rule proposed here has a merit of being simple to implement: it does not require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The observation of the actual behavior of most LDC governments reveals that they do not follow the optimality rule proposed here in any significant way.

One cannot avoid an impression that the tariff rates are just set arbitrarily. In that respect, there is ample room for welfare gain by restructuring tariff rates following the suggestions made in this paper.